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6

### 국민통합 자처한 윤석열 당선인, 여성가족부 존치가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젠더갈등에 대응할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그 지향점은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직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인터넷포털과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저소득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급이 중단될까봐 우려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까봐 불안해한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선거과정 내내 여성 유권자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다”는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귀기울여야 한다. 선거 결과를 두고는 “2030 여성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것은 혐오를 등에 업고 여성의 삶을 묵살한 결과”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길 바란다. 0.73% 초박빙 승리는 혐오와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강력한 심판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성별로 갈라치기하는 세상과, 여성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해온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한들, 통합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할당에 대해서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안된다’는 발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당제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무지와 몰이해가 부끄럽다.

여야를 떠나 역대 많은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다양성을 1순위로 고려해왔다. 특히 성별 안배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배제된 채 남성이 독점해온 정치권의 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여성은 19%에 그쳐 188개국 중 121위로 하위권이며, 내각의 여성들은 늘 손에 꼽힐 정도였다. 반면 ‘여성할당제’라 불리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공무원시험의 추가합격자 수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성평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세우길 바란다.

2022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